

정해년을 맞으며



윤 경 로 | 한성대학교 총장

윤경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소재) 객원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연구』, 『안창호 일대기』,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등이 있다.

언제나 연말이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김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표현을 쓴다. 아님 게 아니라 어느 해 치고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없고,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정해년 올해도 벽두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특히 대통령선거까지 치르는 해여서 1년 내내 이런저런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 데도 벌써 선거판의 열기가 느껴진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학총장들의 어깨도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대학도 나름대로 복잡다단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대학사회도 규모만 다를 뿐 국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총장들은 신입생 유치와 교직원 융화, 기부금 모금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늘 바쁘다.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대가족을 이끌어야 한다. 학생·직원·교수·동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챙겨야 할 것이 참 많다. 가끔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학생회·노조·교협·동문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총장의 자질도 이제는 학덕이나 인품보다는 CEO로서의 능력이 우선된다. 그러면서 매우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댄다. 최근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신입총장에 대한 '검증'은 거의 청문회 수준이다.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가 사라진지 오래여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현재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대학사회에도 '위기론'이 대두된지 오래다. 신입생 충원에 고전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사정은 여간 어렵지 않다. 얼마 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인문학의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수도권 대학의 경쟁도 뜨겁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공에 따라 희비가 교차된다. 이 같은 문제는 몇몇 대학만의 것이 아닌 한국 대학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 같은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함께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 수백 개를 헤아리는 대학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대교협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 여러 형태의 대학 관계자 협의회가 있지만,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 등에 비춰볼 때 대교협만한 조직이 없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대학을 국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면, 대교협의 역할도 UN의 그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혼란할수록 대화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UN의 역할이 중요하듯, 대학사회가 복잡할수록 대교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그것이 대교협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대교협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들에게 대교협은 종합평가·학문평가 등 평가기관으로서의 인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대학평가는 그것을 준비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장단점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평가는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꺼리기 마련이다. 평가의 취지를 대학에 제대로 알리는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대교협 평가에서 '컨설팅'의 성격을 강화하면 대학 측의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학평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개선안까지 제시해 주는 일종의 '종합검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평가가 대교협의 주요 기능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점만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 즉, 대교협이 평가기관이면서도 대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대학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평가기관이라는 '권위' 만으로는 더 이상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

최근 대교협의 활동을 보면 대학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현안인 등록금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록 뾰족한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정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사였다.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대학과 수험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언론의 집중을 받기도 했다. 수요자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끌어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수험생들과 직접 접촉하기 힘든 지방대학들의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

‘교류교수제도’는 연구년을 맞는 교수들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다. 교수들이 연구년을 맞으면 으레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대교협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그같은 관례를 바꾸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사례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대교협의 이같은 활동이 널리 홍보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물론 회원대학들의 무관심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만을 탓할 수는 없다. 대학들이 먼저 대교협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 관계자가 스스로 찾아 올 정도로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홈페이지의 개편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올해 대교협은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한국 대학의 발전에 공헌한 바 크지만 앞으로도 가야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총회에서 새롭게 뽑힌 신임회장을 비롯한 대교협 운영진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대학 관계자들은 누구나 한국 대학의 위기를 말한다. 그럴수록 대교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 대학의 위기는 대교협의 기회일 수 있다. 국제사회에 UN이 있듯이 대학사회에는 대교협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학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대교협의 야심찬 변화를 기대해 본다. 

